

■ 금통위, 콜금리 동결 결정 의미

# ‘집값잡기’ 보단 ‘정책 일관성’ 선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콜금리를 현 수준인 4.50%로 동결키로 한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처방전으로서 금리 인상 대신 그동안 언급해온 정책적 소신을 견지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8월 콜금리 인상 이후 시장에 보내 온 시그널을 채 1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벌어진 광풍에 휩쓸려 뒤집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 경기 등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적 일관성 중시=금통위가 11월 콜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시장에 보낸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압에 떠밀려 정책 방향성을 순식간에 뒤집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며 이 경우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 외압에 떠밀려 정책 뒤집을땐 시장 신뢰성 잃어

### 李총재 “아파트값 상승 관련 韓銀 역할 고민중”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8월에 마지막 콜금리 인상 이후 당분간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을 예의주시할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성태 총재는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지난해 10월 이후 진행된 금리 인상 기조가 8월로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올렸다면 실효성은 있었을까?”=이번에 콜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실효성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과열

을 초래하는 원인인 이상 통화당국이 콜금리 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는데는 대전제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과잉 부동산 문제를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해답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표적으로 한 콜금리 인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해왔다.

이성태 총재는 이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그러나 대출총량규제 등 강성 조치에 대해

선 반대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경기에 미칠 타격도 문제=정확히 일주일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당시만 해도 시장의 관심사는 한국은행이 언제부터 콜금리를 인하할까 여부였다.

그만큼 경기가 하강 기조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한은 역시 그동안 유지해오던 경기 낙관론에서 일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가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가능한 한 빨리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금리라는 정책수단은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경제 일부에서 발생한 일로 금리에 자꾸 손대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한국 ‘국민부담률’ 美·日 수준

내년 기준 26.4%… 올해보다 소폭 낮아져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는 매우 낮지만 미국·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0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와 조세연구원 발간 재정포럼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 기준 국민부담률은 26.4%로 2006년 전망치 26.7%에 비해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이 올해 20.7%에서 내년에는 20.6%로, 사회보장부담률이 올해 6.0%에서 내년 5.8%로 각각 낮아진다는 전망이다. 최근 국민부담률은 2000년 23.6%, 2001년 24.1%, 2003년 25.3%, 2004년 24.6%, 2005년 25.6% 등으로 2004년 한때 하락하기도 했으나 2006~2007년 전망치에 비해보면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다. /연합뉴스

▲국민 부담률 = 조세총액과 사회보장성 기여액(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합한 국민 부담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삼성전자 냉장고 1위

美 권위있는 기관 소비자만족도 조사



삼성전자 냉장고가 미국의 권위있는 소비자만족도조사 기관인 JD파워의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종합점수 818 점을 획득, 켈모어·윌콕 등 세계적 브랜드를 물리치고 1위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24개월간 신규로 냉장고를 구매한 1만2천656명을 대상으로 주요 성능과 사용편의성, 디자인, 가격, 품질보증 등 6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의 냉장고는 특히 소음, 에너지효율 등 성능 부문과 인터페이스 디자인, 가격부문에서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내년 유가 55~65달러 수준”

석유·가스 전문 미국 컨설팅사 팩츠(FACTS)의 대표인 페샤라키 박사는 내년 유가가 배럴당 55~65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페샤라키 박사는 9일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에서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어 유가 40달러 시대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0년대 유가가 10달러 정도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2004년 이후 유가가 한 단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 美 선거 민주당 압승,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보호주의 득세... 개방압력 거셀듯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은 미국 경제정책이 내부적으로는 공화당 정권에 의해 상대적으로 등한 시돼온 민생 개선 쪽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보호주의 색채가 더 짙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낸시 펠로시를 비롯한 민주당 중진들은 잇따라 최저임금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 그리고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 지출 억제 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그간 조지 부시 행정부에 의해 특히 많은 혜택을 받은 제약업계와 에너지 및 군수산업에 대해 메시지를 들이밀 것임을 단단히 버르고 있다.

펠로시 의원은 투표 직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첫 100시간’ 동안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정책 활동을 밝히면서 최저임금 인상, 의료

복지 개선, 교육 지원 확대 등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이 식품위생 강화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면서 이는 메이저 곡물기업 카길이나 식품가공 대기업 타이슨 푸드 등에 압박이 가중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석유업계의 ‘폭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펠로시 의원은 이를 위한 입법에 조속히 착수할 것임을 밝힌 상태다.

제약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약품가격 인하를 모색하기 때문이다. 특히 메디케어 등 의료보험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비협조적이라는 비난이 민주당에서 내내 제기돼온 상태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민주당 압승이 특히 아시아 메이커들에 대한 열세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산에 분주하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명장박람회’

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된 ‘대한민국 명장(名匠)박람회’에서 각 분야 최고의 명장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내보이며 화려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직장인 75% “자녀에게 내 직업 권하기 싫다”

채용포털 사이트인 리서치기관 폴 에버와 공동으로 직장인 1천696명에게 현재 자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권

안정해서(22.3%), ‘일이 힘들어서(19.9%)’, ‘발전가능성이 없어서(19.2%)’ 등을 들었다.

한편 전체응답자들은 자신의 자녀가 종사했으면 하는 직업으로 ‘공무원(35%)’, ‘사업가(12%)’, ‘교사(11.2%)’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 ⑭ 절세상품 뜯어보기(연금저축)

### 절세·고금리 강점... 장기 가입 필수

#### 해지펜 이자+원금에 가산세까지 부과 혜택 매력적인 만큼 ‘노후보장’ 긴투자로

신분·방송·책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제테크 관련 내용을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등장하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이다. 은행의 제테크 팀장들의 갈림을 보면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상대적으로 높은 고금리 등의 이유로 들어 절세형 금융상품의 강점을 역설하면서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으로 추천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절세형 금융상품은 정부에서 ‘절세’라는 매우 강력한 당근을 주는 대신, 잘못 활용할 경우 그만큼의 페널티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따라서 단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무상황과 목표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조목조목 따져보아야

한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 살펴보자.

연금저축이란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해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 금융상품이다. 2001년 2월부터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을 대체해 도입되었으며 취급기관별로 연금저축,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연간 적립액의 10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는 데 있다. 소득구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월 25만원씩 300만원을 적립했고, 소득세율을 18.7%(주민세 포함)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56만원의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 몇지치 않은가? 연 300만원을 내고 이자와는 별개로 원금의 18.7%에 해

달되는 5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연금저축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해지했을 경우 발생하는 페널티와 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하지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해지금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2%(주민세 포함)를 과세한다. 주의할 점은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입한 원금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불입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여기에 2.0%의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연금저축은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십만원의 세금 환급액을 위해 가입해서는 안된다. (TNV 파이낸셜그룹 팀장)

## 금융당국 “보험사기 뿌리뽑는다”

### 금감원·공공기관간 전국민 진료기록 교환

#### 자동차보험 정상화 대책

최근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간에 전국민의 진료기록 등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국민의 건강보험 자료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진료기록을 제공받아 사기 가능성이 높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무

인단속카메라가 대폭 신설되고 경찰관들이 집중 배치되는 한편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을 발굴해 도로나 신호체계 등 시설을 연중무휴로 개선하게 된다.

금감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은 9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을 마련,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범인 보험사기를 적절히 위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과거 교통사고 횡수나 병력,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를 위해 금감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공제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 건강보험자료를 교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간의 자료 제공 요청은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정하기로 했으며 이를 심사할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자동차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미리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한국, 산업기술 세계 6위

### 최고기술 보유국에 5년 뒤져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수준이 세계 6위 수준에 달하고 최고의 산업기술을 보유한 국가에 비해서는 5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산업기술 874개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고의 수준을 보유한 기술은 9개에 불과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2006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전체 수준은 76.8점이었고 세계 순위는 6.2위였으며 최고 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5년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미국의 산업기술 전체 수준은 93.9점, 일본은 90.8점, 유럽은 88.1점, 중국은 61.1점이었다.

산업기술평가원은 개별 국가의 기술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것이 아니라 업계와 학계 전문가 9천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일부 주요 국가의 기술수준 등을 1, 2차 설문 조사를 한 뒤 산학연 전문가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의 검증을 거쳐 순위 등을 평균했기 때문에 소수점 순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